

#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ICT 통상정책 시사점

■ 박 은 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NAFTA 재협상 선언 등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상정책을 빠른 속도로 실행해나가고 있다. 미국의 강경한 보호무역기조 확산에 따른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 산업, 정책적 영향 전망 및 사전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ICT 산업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사전 분석을 통해 우리 ICT 통상 정책 추진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 목 차

### I. 서 론 / 30

1.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 30
2.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무역제재 수단 / 31
3. 미국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 33

### II. 한국-미국 ICT 분야 교역 현황 / 34

1. 한국-미국 ICT 수출입 현황 / 34
2. 한국-미국 ICT 투자 현황 / 36

### III. ICT 통상정책 시사점 / 37

1. 한-미국 FTA 재협상 시 예상 쟁점 / 37
2.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한 ICT 정책 추진 시  
시사점 / 39

### IV. 결 론 / 4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472, ejpark@kisdi.re.kr

# I. 서 론

## 1.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2017년 1월 20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비전은 “AMERICA FIRST”로, 취임 연설을 통해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새 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6가지 주요 정책은 미국 우선의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의 외교 정책, 고용과 성장의 회복, 강한 군대를 회복, 커뮤니티의 안전 확보, 미국인을 위한 통상 정책 등이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주요 선거 공약대로 NAFTA 재협상 계획을 발표했으며, 23일 TPP 탈퇴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다수의 국가 이해를 조율해야하는 TPP 등 복수국간 무역협정 체제를 탈피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무역협정에 치중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력을 무기로 양자 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 NAFTA 회원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한-미국 FTA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 전망은 다수 존재하나, 각 산업별 분석, 특히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이자, 주요 수출 분야인 ICT분야에 특화된 분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ICT 분야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사전 분석을 통해 우리 ICT 통상 정책 추진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표 1〉 미 트럼프의 통상 공약과 현 이행 정도

통상 공약	이행 정도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공세적 무역협상가 임명	반 중국 강경매파 나바로 등 임명 윌버 로스 상무장관 임명
모든 불공정무역행위를 식별, 적극 제재	-
NFTA 재협상	재협상 공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강력 제재	-
중국의 WTO보조금협정 위반 불법보조금 지급 적극 대응 및 WTO 제소	-
중국의 불법 행위에 모든 무역구제수단(201조, 301조, 232조 등) 동원 적극 대응	-

출처: donaldjtrump.com

## 2.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무역 제재 수단

우선 미국의 신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 제재 수단을 점검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제재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국제무역 관련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을 통해 행정부에 상당한 무역 구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등 보편적 무역구제 수단 외에도 환율조작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규제 등 강도 높은 무역 제재 권한을 자국 법률을 통해 행정부가 확보하고 있다. 아래 표는 미국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무역 구제 수단을 간략 정리한 것이다.<sup>1)</sup>

1) KOTRA(2016),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Global Market Report 16-025.

<표 2> 미국 행정부의 주요 보호무역 수단

수단	근거법령	집행기관	무역구제 방안	비고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1930년 관세법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관세 부과	
201조 세이프가드	1974년 무역법 제201조	국제무역위원회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등	
337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1930년 관세법 제337조	국제무역위원회	수입금지, 중지명령	삼성-애플 특히 분쟁 '13년 삼성 스마트폰 수입금지 명령
일반 301조	1974년 무역법 제301조	USTR	양자협상, 관세 부과, 수입제한,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혜택 유예 등	
스페셜 301조 지재권보호	1974년 무역법 제301조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3조	USTR		2008년 이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sup>2)</sup>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	1974년 무역법 제301조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2조	USTR		만료 상태이나, 대통령 행정명령 통해 부활 권한 가짐 <sup>3)</sup>
122조 국제수지 위기 대응	1974년 무역법 122조	대통령	최대 15% 관세 인상 등 (최장 150일 간)	
232조 국가안보 수입규제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	상무부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등	
환율조작국 대응	2016년 무역촉진법 제701조	재무부	미국정부조달금지, 금융지원 금지 등	관찰대상국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
국경세	근거불확실 (트럼프 언급)		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35% 부과, 중국산 수입품 관세 45% 부과	

자료: KOTRA(2016), p.10, 저자 재정리

2) 단, USTR의 스페셜 301보고서에 한국정부의 비허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비판하는 내용은 존재  
3) 1997년 한국의 자동차시장 무역장벽 관련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8년 한-미 양자  
합의 도출

2016년 12월 기준 미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현황은 총 23건으로 5건은 조사 중이며, 18건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가 최대 규제국가이며, 미국은 그 뒤를 이어 2위 규제 국가이다. 주로 철강, 금속, 화학제품에 치중되어 있으며, 2건의 전기전자 규제 건은 세탁기, 유입식 변압기로 ICT 관련 품목은 아니다.

〈표 3〉 미국의 대 한국 수입 규제 현황(2016. 12월말 기준)

	철강/금속	화학제품	섬유류	전기전자	기타	총계
미국	18(3)	2(2)	1	2		23(5)
인도	9(3)	18(3)	3(1)		2(1)	32(8)
중국	1	7	2	1	2(2)	13(2)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2016.12), 對韓수입규제 월간동향

\* ( )내 표시부분은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기타: 제지, 생활용품, 농산물, 기계류 및 잡제품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가 강화될 경우,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상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무역장벽 대응을 강화한다면 한국산 제품들도 중간재 수출이 위축되거나, 동일한 한국산 제품까지 함께 제소되는 경우도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NAFTA 재협상 등 미국과 멕시코간 통상마찰이 빚어질 경우에도 멕시코 현지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 등이 악영향을 받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sup>4)</sup>

### 3. 미국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미국 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 IT 기업의 해외 우수 인력

4) 진성훈·이준규(2017. 1. 22), 미국제일 트럼프 취임에 떠는 한국 경제, 뉴스 1  
<http://news1.kr/articles/?2892495>.

유치에 장벽으로 작용, 이들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중국, 멕시코 등 해외생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존 IT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춘(Fortune)에 따르면 애플이 생산업체 폭스콘(Foxconn)과 페가트론(Pegatron)에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논의한 결과, 페가트론은 생산비용 증가를 이유로 거절했으나 폭스콘은 이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이들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IT산업의 미국 내 위상이 상당한 점을 감안한다면 형식적인 가벼운 규제만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도 존재한다.<sup>5)</sup>

## II. 한국-미국 ICT 분야 교역 현황

### 1. 한국-미국 ICT 수출입 현황

#### (1) ICT 산업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ICT 상품의 대 미국 무역수지는 2016년 9,472 백만 달러 흑자로 휴대폰(68.3억불, 3.1%↑), SSD 중심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15.4억불, 24.6%↑), 반도체(33.5억불, 1.2%↑)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sup>6)</sup> 미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 ICT 상품 수출 2위 국가이나 중국이 전체 ICT 수출의 52.6%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10.8%, 베트남 9.9%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ICT 분야의 경우 미국의 직접적 무역 제재의 우려보다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한 간접적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ICT서비스 수지는 상품처럼 통관 자료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수치이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통신, 컴퓨터, 정보서

5) 국제무역연구원(2016. 12. 7), 트럼프 정책에 따른 미국의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 pp.3~4

6)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7. 1. 16), '2016년 ICT 수출입 동향'

비스 전체 경상수지는 702.50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한국의 대 미국 동 분야 경상수지는 154.70 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 미국의 ICT서비스가 한국 시장 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한국의 대 미국 방송 프로그램 총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5년 전체 수입 중 29.6%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전체 외국물 수입 중 87.5%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반면,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대 미국 수출은 지상파 3.7%,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6.6%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방송시장에서 미국 방송프로그램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방송시장이 미국 콘텐츠사업자에게 주요 전략시장은 아닌 상황에서 한-미 FTA 이상의 방송시장 개방 요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표 4〉 한국의 대 미국 지상파방송 수출입 현황(2011~2015년)

구분	수출입금액(천\$)		국적비중(%) (수출입 금액 기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5년	6,004	1,292	3.7	29.6
2014년	5,472	2,028	2.6	36.5
2013년	9,374	546	4.4	17.6
2012년	11,950	1,141	7.78	25.5
2011년	2,555	1,891	1.6	44.5

자료: KISDI(2012~2016),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비고: 해외교포방송지원과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과 포맷 판매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

〈표 5〉 한국의 대 미국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출입 현황(2011~2015년)

구분	수출입금액(천\$)		국적비중(%) (수출입 금액 기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5년	8,606	117,820	16.6	87.5
2014년	3,759	39,386.8	8.5	73.2
2013년	977	96,965	2.0	97.1
2012년	615	106,773	2.3	86.4
2011년	967	110,371	8.9	89.2

자료: KISDI(2012~2015),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비고: 해외교포방송지원과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과 포맷 판매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

## 2. 한국-미국 ICT 투자 현황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 및 방송분야 투자는 비교적 활발한 편으로, 한국의 해당 분야 누적 해외투자액 중 17.5%가 미국에 대한 투자이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대 한국 내 정보통신 및 방송분야 외국인투자 규모는 해당 분야 전체 투자액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국 FTA를 통해 한국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미국투자자가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로 국내 PP 지분의 100%를(기존 49%제한) 소유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타임워너의 한국 자회사가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카툰네트웍스코리아의 지분을 2015년 4월 100% 소유, 인수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미국 FTA 추가 개방에 따른 미국 기업의 구체적 혜택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표 6〉 미국-한국 정보통신 및 방송분야 투자

신고금액(백만\$)		국적비중(%) (해당 분야 투자 총액 대비)	
해외투자(outward)	외국인투자(inward)	해외투자(outward)	외국인투자(inward)
6,047	3,004	17.5%	22.8%

자료: 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업종별 해외투자현황”(산업분류: 방송업, 영상오디오기록물 및배급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통신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해외투자 금액 합산)  
 2)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2011~2016년 누적 금액, 산업분류: KSIC 중 전기전자 제조업, 통신서비스, IT서비스, 유선및위성방송서비스, 기타문화방송서비스 외국인투자 금액 합산)

### Ⅲ. ICT 통상정책 시사점

#### 1. 한-미국 FTA 재협상 시 예상 쟁점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17. 1. 22 NAFTA 재협상을 공식화하는 등 기존 FTA에 대한 전면적 재협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압력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분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10년에 이루어진 한·미 FTA 추가협상의 전례를 비추어 보면 당사국의 이익 또는 손해가 두드러진 분야 중 통상압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트럼프의 제조업 보호주의 성향을 감안하면 자동차와 철강 부문에서 추가 문제 제기 가능성 존재한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금융, 법률 서비스, 의약품가격산정, 공정위 절차 시장 개방 관련 추가 문제 제기 가능하다.<sup>7)</sup>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국 FTA 재협상 시 ICT 분야 예상 쟁점 사항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IT상품의 경우 이미 ITA, 한-미국 FTA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 11. 9), 미국 신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요 IT 수출 품목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로 수출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국 FTA IT상품분야 재협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IT 상품이 우리의 주요 수출 흑자 품목임을 감안할 때, 미국이 관련 무역 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바,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 및 부품, 반도체 등 기존 무관세 품목의 수출 부진으로 전기전자 산업 전체의 대미 수출은 한-미국 FTA 발효 이후 2015년 5.2% 감소했다는 객관적 정보<sup>8)</sup> 등을 통해 IT상품이 한-미국 FTA로 인한 수혜품목은 아님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이미 한-미국 FTA 차원에서 타결 당시 국내법 수준 이상의 최대 시장개방을 약속하고 국내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이행 완료한 바, 추가 시장개방 압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SKT, KT를 제외한 모든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49% 외국인지분 참여 제한에 대해 국내 매개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일 경우 해당 국내 매개법인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100% 까지 허용하고 있다. 방송서비스 역시 종편, 보도, 홈쇼핑 제외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매개법인을 통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를 허용하고 있으며, 비지상파방송(PP, SO, 위성) 국내물 편성쿼터를 영화는 25%에서 20%,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으로 하향 조정하고, 수입방송물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등 한-미국 FTA 통해서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최대 시장개방을 이미 약속하고 있다. 특히 앞서 한미간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경상수지 분석 결과 미국이 흑자를 누리고 있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매개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지분제한 철폐를 통해 실제 미국 기업이 한국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100%로 소유한 사례가 존재 하는 등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어 한-미국 FTA를 통해 미국이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미국 FTA를 통해 미국이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미국 FTA 재협상 시 ICT 분야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이

8) 무역협회(2016. 3),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

될 가능성이 높다. TPP, TISA 등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신규 무역협정이 무산 또는 지연됨에 따라, 만약 한-미국 FTA 재협상이 추진된다면 TPP, TISA에서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던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을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추가 도입 압박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이동 보장 의무, 컴퓨팅설비 현지화 요건 부과 금지 의무<sup>9)</sup>는 아마존, 구글, IBM,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의 적극적인 요구로 성안된 신규 디지털 무역 규범이다. 기본적으로 각국이 자국에서 생성된 데이터 또는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물리적 설비(데이터 센터 등)를 자국 영역 내에만 두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글로벌 ICT서비스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해당 규범의 최대 수혜자임을 감안할 때, 미국은 향후 양자무역협정 협상 시 관련 규범의 신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이 전 산업 분야에 미치는 상당한 파급력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과 신규 통상규범간 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도 정책 제개정 시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 2.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한 ICT 정책 추진 시 시사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보복 무역조치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주로 철강, 화학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ICT 상품이 우리의 주요 수출 흑자 품목임을 감안하고, 중국에 상당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무역 구조<sup>10)</sup>를 감안할 때 미국이 중국 상품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우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

9)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의무 역시 주요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이나, 이는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채택하고 있음  
10) 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대 중국 수출 중 중간재 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가공 수출 비중은 2016년 51.9%에 이릅니다

국산 제품이 함께 제조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과 동일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입국의 대중국 수입물량 추이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sup>11)</sup> 우선 과거 미국에 의해 문제 제기되었던 실제 ICT 분야 분쟁 사례나 현재 미국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ICT 정책 추진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다.

우선 반덤핑관세 및 보조금상계관세 등 고율 관세 무역 보복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2000년 초반 WTO 보조금협정 관련 한-미 간 하이닉스 DRAM 반도체 WTO 분쟁 사례,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우리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했던 차세대 반도체 사례 등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중 연구개발 보조금 사례는 보조금 협정 관련 ICT 분야 연구개발 등 정책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ICT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보조금성과 특정성 여부는 세부 사업의 성격과 지원내용 및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바, 연구개발 지원사업 성격 분류를 산업중립적, 기술중심적으로 분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주로 출연사업 또는 용자사업으로 수행되므로, 재정적 기여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기에 연구개발 지원 이후 적극적인 기술료 환수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게 지원된 혜택을 최소화하여 상용화 이후 상계조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 사업이 기술중립적이고 특정성 없는 IT원천기술이나 기반기술을 위한 지원임을 명확화하고, 수출촉진, 수입대체 목적을 가진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sup>12)</sup>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가장 대표적 비관세 장벽은 바로 기술무역장벽이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 외 중국이 자체 개발한 wifi 표준, 3G, 4G 표준 등

11) 제현정(2016. 10),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16년 36호, p.27

12) 안덕근(2008),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WTO규범 저촉성 연구', 이슈페이퍼 08-14, 한국산업기술재단

을 기업들이 사실상 채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 표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양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다.<sup>13)</sup> 우리나라는 과거 WIPI, Wibro 무역 마찰 사례를 통한 교훈 및 양자 FTA를 통해 별도의 진일보한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 관련 통상 규범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법에 합치하도록 유념하여 기술표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 재검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 관련 기술무역장벽은 이미 다자 차원에서 WTO TBT 협정을 통해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가 국내외 제품간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품에 대한 규범이며 서비스 기술표준 관련 다자 통상 규범은 아직 상품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미국은 한-미국 FTA 등 미국이 체결한 FTA, TPP, TISA 등 자국이 추진하는 무역협정을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기술표준제한조치가 무역제한적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적극 추진해왔다. 우선 한-미국 FTA 통신서비스 챕터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통신서비스 관련 기술표준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기술표준 제한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발생시키거나 자국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표준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정부는 정당한 공공정책목적은 정의할 권한을 보유하나, 무선통신 분야의 정당한 공공정책목적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전파간섭 방지 포함), 소비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지속적 접근 보장(국제표준에 근거한 글로벌 로밍 보장 포함), 인체 건강 보호, 법집행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한-미국 FTA 통신서비스 기술표준 규정은 사전 및 사후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기술표준조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자율로 공공정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통신사업자 및 장비 제조업체에게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표준조치의 채택 후에도, 사업자가 다른 기술표준의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경우, 이유를

13) USTR(2016), 2016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명시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고, 요구서(가능한 경우)와 답변서는 공개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전술한 통상 규범을 더욱 유념하여 향후 ICT 분야 기술표준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 미국의 주도로 통신뿐만 아니라 TISA, TPP 등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 기술 선택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규범(정당한정책목적에 위한 제한조치 예외 인정)이 채택, 논의되고 있는 등 미국의 주도로 서비스 분야에서도 TBT와 같은 기술 관련 규범 정립이 시도되고 있는 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기술, 표준 정책 수립 시 지속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최근 사례로 201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삼성 간 특허분쟁에서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삼성 구형 스마트폰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 결정하였으며,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ITC 결정을 수용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미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게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ICT 무역 구조를 보다 다각화하도록 노력하면서, 업계와 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적극적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 IV. 결 론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가속화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속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현 국제 무역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미국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무역 구제 수단을 확인해보았다. 또한 한국과 미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분석하여 ICT 분야에서 각국의 교역 구조는 실제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점검하였다. 이러한 사전 분석을 통해 한-미국 FTA

재협상 시 예상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응방향성은 제시하였으며, 미국이 ICT분야에 있어 부과 가능한 무역 제재 쟁점을 예측, 이에 대한 정책 추진 시 유의사항을 제언하였다.

지금까지 미국 USTR이 매년 발표하는 각 국의 무역장벽보고서인 NTE보고서 상 ICT 분야에 대해 지적해오던 부분은 대부분은 국제통상법과 정합하는 내용이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감안할 때, 무역보복조치 가능성 등에 더욱 유의, 정부 차원의 무역장벽 조기 감시체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미국 행정부의 자체 무역 구제 수단 중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는 개별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며, 반덤핑관세의 경우 개별기업이 직접 대응해야하는 사안으로 자체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관련 보호무역 수단의 종류, 발동 절차, 유의사항, 대응방안 등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가능한 선에서 법률자문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소가 잦은 철강, 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ICT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유의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하연·윤승환·박은지·박영덕·김재형 (2015), ICT 무역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기본연구 15-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국제무역연구원 (2016. 12. 7), 트럼프 정책에 따른 미국의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Global Market Report 16-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11. 9), 미국 신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안덕근 (2008),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WTO규범 저촉성 연구’, 이슈페이퍼 08-14, 한국산업기술재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2015),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제현정 (2016. 10),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16년 36호, p.27.

KOTRA (2016),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Global Market Report 16-025.

한국무역협회 (2016. 3),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2016. 12), 對韓수입규제 월간동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업종별 해외투자현황”.

진성훈·이준규 (2017. 1. 22), 미국제일 트럼프 취임에 떠는 한국 경제, 뉴스1  
<http://news1.kr/articles/?2892495>.

donaldjtrump.com

USTR (2016). 2016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